□성명서□

농식품부는 낙농기반유지대책, 소비기한문제가 남의 일인가!

12.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1년 예산안이 처리된 가운데, 낙농예산 확충(원유수급조절사업, 가공원료유지원사업)이 농식품부의 반대로 끝내 반영되지 못했다.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농식품부가 원유수급문제의 화살을 낙농가에게 돌려 반대했다는 소식을 접한 낙농가들은 허탈한 웃음만 나온다.

국회에서 예산증액이 쉽지 않다는 것은 우리 낙농가들도 잘 알고 있다. 다만 낙농가들은 농식품부가 현재 낙농이 직면한 상황을 올바르게 설명하고 낙농기반유지대책마련을 위해 국회와 예산당국을 설득해주기를 바랬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오히려 여야(與野) 국회의원들이 낙농예산 증액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자, 현재 공급과잉 상태로서 이는 코로나19 영향이 아닌 원유생산량 증가에 원인이 있다며 사실과 다른 보고로 일축했다. 우리협회는 국회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끝까지 국회를 설득하고 나섰지만, 결국 주무부처가 반대한 예산에 대해 예산당국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또한 식약처가 추진하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도입될 경우 현재 유통매장에서의 불완전한 냉장관리실태로 인해, 우유 변질사고가 빈번히 발생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우리협회는 선진국 수준의 법적냉장온도 기준강화, 유통매장 실태조사를 통한 냉장관리체계 및 점검시스템 마련, 냉장온도, 제품보관방법 등 철저한 소비자 교육 등 사전대책 마련을 농식품부와 식약처에 건의하였다. 그러나 정작 식품산업 정책을 총괄하는 농식품부는 소비기한 도입 시 우려되는 낙농산업 및 식품산업의 파장을 도외시 한 채 부처의견 조차 식약처와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 제시하지 않았다.

현장 낙농가들은 일련의 낙농현안 마다 해결은커녕 발목만 잡는 농식품부의 모습이 너무나 낯설다. FTA수입개방과 코로나19영향(학교우유급식중단)에 따른 원유수급문제로 인해 낙농진흥회와 유업체는 4~10%의 낙농가 쿼터감축에 나서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향후에도 농식품부의 무책임한 행태가 지속될 경우 낙농산업의 미래가 없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당국자들이 낙농가들의 간이나 보고 책임회피에만 골몰하는 구태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존재의 이유가 없다. “개도 나갈 구멍을 보고 쫓는다!” 라는 속담이 있다. 전국 낙농가의 인내심도 이제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아스팔트낙농을 하지 않을 거라고 착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2020. 12. 4(금)

한 국 낙 농 육 우 협 회

전화 : 02-588-7055 / 팩스 : 02-584-5144

홈페이지 : www.naknong.or.kr